

주간 통일정세

2014-44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北조평통, 호국훈련 비난...“북침전쟁연습 용납못해”(11/12, 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2일 서기국 보도에서 호국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라며 "무분별한 북침 전쟁연습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특히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상에서 잇따른 군사적 충돌 위기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우리 함선과 군인들에게 마구 총포 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수차례나 감행했다"고 주장함.
 -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평화를 강조한 와중에 진행된 호국훈련은 결과 속이 다른 남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해 북침 핵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국방위, 南에 군사훈련·전단살포 중단 재촉구(1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5일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면 미국을 끌어들이 벌이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고 동족을 겨냥해 벌이는 '호국-14'와 같은 실전북침전쟁소동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또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우리 체제를 헐뜯어대면서 마주앉아보겠다는 그 자체가 철면피의 극치"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통신 "더 높은 애기봉 등탑 건설은 엄중한 도발"(1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반공화국 심리전 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새로 건설 예정인 애기봉 전망대를 언급하며 "무모한 망동으로 조성될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애기봉 등탑 확대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힘.
 - 이어 논평은 "애기봉 등탑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해 북남 사이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광란적인 대결 소동의 상징물"이라며 전망대 높이를 높이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일으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노동신문 "빠라 중단없이 대화 없다"…南 거듭 압박(11/10,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0일 '북남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꾀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빠라 살포를 중단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헐뜯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생역지"라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표현하며 "대통령 감투를 쓰기도 전인 2012년 10월 반공화국 빠라 살포에 앞장선 쓰레기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자들과 함께 먹자판을 벌여놓고 격려해주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 역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구차한 변명"라고 주장함.

- 北 신문 "독도시설 건립 취소는 친일 굴종행위" 비난(1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검토하기 위해서인가, 포기하기 위해서인가'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측이 "독도시설물 건설을 취소한 것은 일본 상전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친일매국노적 기질의 발로"라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은 동족대결 야망이 골수에까지 들어박힌 나머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도 않고 재침을 꿈꾸는 침략세력(일본 지칭)과 결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유신 독재자의 친일바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집권세력의 행적은 걸음걸음이 치욕스러운 대일 굴종으로 일관돼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사대매국노들의 친일 굴종 행위로 오늘은 독도의 주권이 농락당했다면 내일은 민족의 운명이 통제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굴러 떨어질 수 있다"라며 "현실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을 지키자면 사대매국노들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 호국훈련 거듭 비난...“북침전쟁책동 좌시안해”(11/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연평도의 교훈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을 언급하며 "무모한 북침 전쟁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도 '전쟁머슴꾼의 어이없는 허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호국훈련을 비난하며 "이 불장난 소동이 가뜩이나 침예한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에 어떤 파국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호국훈련에 맞춰 판문점 JSA서 저장도 도발"(11/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보도를 통해 북한군이 10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저장도 도발을 감행해 군 당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군 10여명은 10일 오전 9시40분께 JSA내 우측 MDL로 접근해 설치된 'MDL 푯말'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받고 오후 1시께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현정은, 금강산관광 16주년 행사차 18일 방북(11/16, 연합뉴스)
 - 통일부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의 금강산 관광 16주년 행사를 위한 방북을 16일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현 회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등 22명은 18일 오전 10시 강원도 고성외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출경해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한 뒤 현지시설을 점검하고 오후 4시께 돌아올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는 "정부는 순수한 기념행사를 위한 방북인 만큼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도 매년 방북을 승인해 왔다"며 "기념행사 외에 북한측 관계자와의 별도의 면담계획은 없다"고 밝힘.

바. 남북 사회 관계

- 유진벨재단 "내년 봄 北에 결핵병동 3동 지을 것"(1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보도를 통해 북한에서 결핵치료 지원사업을 해온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내년 봄 북한에 결핵치료 병동 3동을 새로 짓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고 전함.
 - 유진벨재단은 이번 방북 기간 다제대성결핵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1천100여 명의 환자에게 모두 7억7천만원 어치의 결핵치료약을 전달했다고 뉴스는 전함.
- 평양과기대, 이달 19일 첫 학부 졸업생 배출(1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보도를 통해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이달 19일 첫 학부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전함.
 - 평양과기대를 북한 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관계자는 11일 "평양과기대 첫 학부 졸업식이 11월 19일 열린다"라며 "하지만 북한 당국의 에볼라 방역 조치로 외부인사들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7개 종교단체, 남북 공동행사 관련 北접촉 신청(1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보도를 통해 7개 종교단체가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해왔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고 전함.
 -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장재언 조선카톨릭협회중앙위원장 겸 조선종교인협의회장을 비롯한 북측 종교 단체 관계자를 만나 남북 공동행사 개최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남북 종교교류와 관련해서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접촉신청 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인원은 실무협약에 필요한 위주로 검토할 계획으로, 조만간 검토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韓美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단단히 틀어쥐는 동시에 美 군수독점체들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적인 책동이 낳은 것'이라고 비난(11.10, 중앙통신)
- 北 [조국통일연구원],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상보」를 통해 이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南 당국의 솔직한 인정과 심판대에 나설 것, 진상규명·관련자 처벌'을 주장(11.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통일헌장' 제정 추진('15년 광복 70주년 계기)에 대해 '체제대결을 극대화하려는 책동의 일환, 흡수통일야망 실현'이라고 비난 공세(11.11, 평양방송)
- '호국훈련' 실시 관련 '북침을 노린 무모한 군사적 망동, 북남관계 파국을 부추기는 군사적 도발소동'의 제목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범죄적 망동이고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우리(北)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경우 천백배의 보복타격으로 전면 소탕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11.12, 평양방송)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11.13)】 우리 軍의 호국훈련을 '온 거래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北)는 괴뢰패당의 북침핵전쟁 책동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강위력한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공군의 '맥스썬더' 연합훈련(11.14~22, 군산기지) 예고,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장본인'이라고 비난(1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인권문제 관련 '南 당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심각한 집권위기에선 벗어나기 위한 공여지책의 발로이며 체제통일과 반공화국 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발악적 책동의 산물'이라고 왜곡 주장(11.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3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도를 외세에 내맡긴 쓸개 빠진 매국 역적들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며 '韓美의 무기장사놀음은 우리(北)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떠밀 뿐'이라고 비난(11.16,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남이 쓴척'...北매체, 일본인 유골문제 '꼼수' 비판(11/10,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보도에서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 '1코리안뉴스'에는 '묘비없는 무덤, 일본인 유골 문제를 살펴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며 글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이 글은 "일본인 유골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일제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며 일본이 북한 내 사망자 유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함.
 - 연합뉴스는 13일 보도를 통해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한 이 글이 '1코리안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인 역사학자 조희승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함.
- 조선신보 "北, 오바마 친서 주목...美 행동 따라 호응"(11/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데 주목하며 앞으로 미국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밝힘.
 - 신문은 11일 '정보기관 총괄자가 전달한 오바마 친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정보기관의 최고수장을 평양에 파견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와 각오는 앞으로 미국이 취하게 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함.
 - 또 "미국은 승산이 없는 (대북) 강경책에 매달려왔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그러한 실패를 바로잡고 대책해야 할 위치에 있는 DNI 국장이 교전 상대국의 수도를 방문한 것은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조선도 적대관계에 있는 정보기관의 최고위 인물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함.

- 北 “北 미사일 잠수함 보도’는 美의 교활한 술책”(1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이 언론을 통해 우리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에 대해 계단식으로(단계적으로) 계속 여론화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소개함.
 - 이어 "이것은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마시켜 고고도미사일 방위체계(THAAD·사드) 구축을 강행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논평은 "미국이 우리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여론을 확대하여 국제무대에서 대조선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고 타산(계산)했다면 그보다 큰 오산은 없다"며 "그것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오바마 “억류자 석방은 작은 제스처…북,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11/10, AFP, DPA; 로이터통신)
 - AFP, DPA, 로이터통신은 10일 보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두명을 석방한 것은 작은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함.
- “美 재무부, 北 관련 금융거래주의보 또 발령”(11/14, 미국의소리)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금융거래 주의보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 상업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힘.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前 소련 국방장관, 김정은에 감사편지…북러친선 과시(1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야조프 전 장관이 자신의 90회 생일을 축하해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답례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2면에 그 전문을 게재함.
 - 전문에 따르면 야조프 전 장관은 발신일이 이달 9일로 된 이 편지에서 지난 8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김 제1위원장이 친서와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파견한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함.
 - 이어 "오늘 당신(김정은)께서는 저 자신뿐 아니라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다"라고 강조함.
- "北-러시아,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 체결"(11/12, 미국의소리;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상호 강제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12일 보도를 통해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양국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면 구금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입국자 혹은 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1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매춘·색정문화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고 전함.
 - 통신은 "조선이 이번에 상기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정부의 아동중시정책과 인권 분야에서 자기 할 바를 다해나가며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과시"라고 강조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美 해군의 SM-6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교전능력 테스트 성공 관련 "세계평화와 안전파괴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며 '무력증강 책동 중단' 촉구(11.1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최근 미국에서 연이은 총격사건(10.24, 워싱턴주 교교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논할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인권재판관 행세' 조소(11.11, 중앙통신·민주조선)
- 총련일꾼 대표단(단장: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 부장), 11월 12일 비전향장기수 최태국과 상봉모임 진행(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4일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팔레스티나국가 선포' 26주년 축전(1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교예배우들(*제11차 무한국제교예축전 참가, 11월1일~6일 중국), 11월 14일 귀환(11.14,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중앙양묘장 시찰(1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중앙양묘장을 시찰하고 나무심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앙양묘장의 묘목온실, 묘목포전, 나무모영양단지 등을 둘러본 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산림 황폐화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중앙양묘장의 묘목생산기지 확장과 묘목 생산에서 선진과학기술 수용, 산림과학원 리모델링도 강조했다고 전함.
 - 중앙양묘장 시찰에는 최룡해·최태복·오수용 노동당 비서와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수행했고 현지에서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 일꾼들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동영상 공개…지팡이 짚고 부축받기도(11/1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1일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 '40일 잠행'을 끝내고 지팡이를 짚은 채 공개 활동을 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함.
- 北 김정은, 軍 식료품공장 시찰…생산 현대화 강조(1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된 인민군 산하 식품공장인 '2월20일공장'을 현지도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라고 강조했다음을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공장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최룡해, 김정은 특사로 17~24일 러시아 방문(11/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언론보도문을 통해 "최룡해 비서가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이달 17~24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러시아 외무부가 "최룡해 특사의 방문 기간에 정치대화 수준 격상, 통상경제관계 활성화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을 포함한 양자 관계 현안과 상호 관심사인 일부 국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도 14일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신문 "김정은 있어 사회주의 기적 이어질 것"(1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1면 전체에 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약동하는 조선의 힘이다'라는 제목의 '편집국 논설'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3년간 활동을 집약하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띄움.
 - 논설은 "시대의 생눈길을 헤치고 조선이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자문하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선택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비약적

발전을 담보하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함.

- 논설은 또 미국에 대해 "우리 인민을 핵 선제공격의 희생물로 만들어 세계무대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며 "제국주의는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모든 인간적, 이성적 능력을 상실한 횡포무도한 침략자, 약탈자들"이라고 비난함.
- 北 "머지않아 김정일 3주기"... 벌써 추모분위기 조성(11/1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2일 '위대한 장군님과 영원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혁명적 품모'라는 글에서 "우리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과 피눈물 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3년이 되어온다"고 3주기를 직접 거론함.
 - 또 신문은 "지난 3년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계셨다"며 당원, 장병,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프랑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3주년을 추모하는 회고위원회가 조직됐다고 전함.
- 北, 김정일 3주기 분위기 부각... "선군혁명 업적 빛내자"(11/1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업적'과 공업 발전에 쌓은 '업적'을 부각하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대이은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어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선군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어나가야 한다"라며 "누구나 김정은 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참된 동지, 진정한 선군혁명 전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도 14일 여러 지역에 김일성·김정일 모자이크벽화가 새로 세워진 소식과 우크라이나, 네팔, 우간다 등 여러 나라에서 김정일 추모위원회와 '회고위원회'가 결성됐다고 잇달아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움.

- 北, 사설을 통해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모두다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고 호소(11.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 일꾼 대표단, 만경대방문 및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김정숙평양방직공장·능라곶등어관 등 참관(11.11, 중앙통신)
- 4.15총성의 돌격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11월 12일 오수용(黨중앙위 축하문전달)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1.13,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 현지도도 및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과학자·기술자들(공장현대화사업에 적극 기여)에게 「감사」 전달(11.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일 사망(12.17) 3주기 관련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 부각 칭송 및 '김정일 업적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어 나가는 것은 혁명적 본분'이라고 '김정은에 총성' 강조(11.14,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박금산(前 자강도 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대장)에게 "공화국영웅(*7월 18일, 폭발물처리 작업 중 사망)" 칭호 수여식, 11월 14일 진행(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5일 시리아 대통령에게 '시정운동' 44돌 즈음 축전 발송(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일꾼대표단(단장: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 부장), 11월 15일 귀국(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내륙철도 현대화, 남북-유라시아 철도 첫 단계"(11/8, 통일신보: 1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신보 11월 8일자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각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의 김철호 부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이 "조로(북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대규모 철도협조계획 실현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고 11일 전함.
 -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철도 개건사업은 모스크바 선언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협조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모스크바 선언에는 조선의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중계수송로를 창설할 데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함.
 - 김철호 부국장은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그 후 여러 단계에 걸쳐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통일신보를 통해 밝힘.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고려항공, 평양~함경도·양강도 노선 정기 운행(11/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7월부터 평양과 함경남도 선덕, 함경북도 어랑, 양강도 삼지연을 오가는 고려항공 정기노선을 개설해 운항 중이라고 전하면서 "과거에 이들 구간을 잇는 항공편은 있었지만 정기항로는 아니었다"며 "평양~삼지연 구간은 거의 만석이며 겨울철에 운항하지 않는다"고 밝힘.
- "北, 평안북도 동림군 서양관광객에 개방"(11/13, 연합뉴스)
 - 13일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양 관광객들이 신의주시 부근의 동림군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13일 보도함.
 - 뉴스는 서양 관광객들이 중국의 국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차량으로 신의주와 동림군을 방문하거나 평양에서 기차로 이들 지역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함.
- 北 '조선 명승지로 오세요'...매체마다 관광지 홍보(11/16,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6일 입수한 금수강산 11월호는 '조선의 관광지를 찾아서'라는 이름의 코너에서 삼지연을 비롯한 백두산 일대 명소들을 소개함.
 - 금수강산은 '조선의 관광지를 찾아서' 코너를 10월호부터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10월호 첫 기사에서는 작년 10월 들어선 승마장인 미림승마구락부를 포함한 평양의 명소들을 소개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방북 기자단에 외국인 투자혜택 소개"(11/12, 자유아시아방송;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을 찾은 유럽 언론인들에게 투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함.
 - 연합뉴스는 1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이번에 유럽 기자들과 북한 관리의 만남을 주선하고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세금, 인건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중국 옌벤, 북한 연결 국경통상구 인프라 보강(11/13, 연변인터넷방송; 연합뉴스)
 - 13일 연변인터넷방송에 따르면 옌벤 주는 국가 자금을 유치해 허룡(和龍)시 난팡(南坪)통상구, 투먼(圖們)시 국경 다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합뉴스는 13일 중국 현지 소식통들이 북·중이 취안허~원정리 새 국경 다리를 내년 5~7월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북한 함경북도·양강도와 9개, 러시아 연해주와 1개 국경통상구를 운영 중인 옌벤은 장기적으로 두만강 하구에 '북·중·러 3국 국제자유관광구'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함.
- "獨NGO, 北서 20억 규모 채소종자 생산 지원"(11/14, 미국의소리)
 -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벨트홍거힐페'가 내년부터 북한에서 채소 종자 생산사업을 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이 단체의 게르하르트 우마허 북한담당 국장은 VO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중국 배추와 토마토, 고추 등 8~10개 종류의 채소 종자를 생산하고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가 북한 전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힘.

-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 농업 협력에 가속도(11/14, 연합뉴스·인테르팍스통신)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은 뒤 생산물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농업협력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함.
 -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북한 농업부 고명희 부부장이 14일(현지시간) 극동 하바롭스크주를 방문해 이 지역의 농지 1만 헥타르(ha) 이상을 빌려 채소 재배, 목축, 농산물 가공 공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

- "北·中 원유거래 정상…통계 고의누락 추정"(1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기사를 통해 중국 정부의 통계 수치상으로는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중국이 장기간 북한에 원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함.
 - 뉴스는 정부 당국자가 14일 "중국 통계에는 원유 수출이 전혀 안 잡혔지만 실제로는 수출 방식이든 원조 방식이든 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이 민감한 원유 수출 통계 수치가 외부의 주목을 받는 것을 꺼려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음을 전함.
 - 정부는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기간산업 시설인 평안북도 피현군의 봉화화학공장을 가동 중인 정황도 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뉴스는 전함.

- 수산과학분원 서해바닷가 양식연구소, '공업적 방법으로 바닷지렁이, 왕새우 증식' 성공 보도(11.10,중앙통신)
- 계철호(신대외박출공장 지배인), '신대외박출이 아시아·유럽지역 등지에서 인기가 높다'며 제품 소개(내마모성 등) 선전(11.11,중앙통신)
- 함흥시멘트공장의 10월 31일 현재 연간 시멘트생산 계획 117.8% 초과 및 평양시여단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공사량 85% 수행 선전(11.11,평양방송·중앙방송)
- 윤영석(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 부총국장),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2개 도(직할시)에 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했다고 소개(11.12,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역도, 세계선수권서 금메달 행진…리정화도 금(11/12, 조선중앙통신)
 -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북한 여자 역도선수 리정화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또한 중앙통신은 북한의 김명혁이 지난 10일 남자 69kg급 용상과 합계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함.
- 北 대입 '뇌물액'도 올라…"김일성대 입학 5천달러"(11/1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대북 무역상을 인용해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 같은 곳에 입학하려면 최소 미화 4천~5천 달러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액수는 3년 전보다 20% 오른 것"이라고 전함.

- 대학 졸업 후 관광안내원 등으로 배치받을 수 있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관광봉사학부의 경우 입학 뇌물은 3천 달러 정도이며 상류층 속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은 김일성대 부속 평양의학대학은 밴 종류의 차량을 1대 바치면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다고 RFA가 전함.
- 이어 RFA는 황해북도 사리원농업대학의 경우 최소 300달러, 많게는 800달러의 뇌물을 주면 입학할 수 있다고 전함.

■ 北 '어머니날' 맞아 여성 역할·충성심 강조(1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선군시대 어머니들은 애국충정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자식들을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선군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주문함.
- 신문은 '혁명의 어머니들의 영원한 사랑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은의 증조모 강반석과 조모 김정숙의 희생을 부각하는 일화를 소개하며 그들의 모성을 강조함.

- 제15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11.10~14) 개막식, 11월 10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10, 중앙통신)
- 北 김은국 선수, 2014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카자흐스탄)에서 금메달 3개(인상, 용상, 합계) 획득(11.10, 중앙통신)
- 강효남(조선항공협회 서기장), "공화국선수권대회 및 청년선수권대회 낙하산 정점 강하경기" 진행(평양 항공구락부, 5일간) 및 '경기 성과 및 개인·집단경기 결과' 등 전언(11.11, 중앙통신)
- 박철수(남포시 위생방역소 실장), 남포시의 에볼라 바이러스 위생방역사업(격리병동 구비·치료제도 구성, 외국인 격리·의학적 감시 등) 전개(11.11, 중앙방송)
- 박무송(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처장), '北, 비물질 문화유산(현재, 민요 '아리랑'·김치담그기 풍습 등 20여개 등록) 보호사업 전국적 추진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위한 국제기구 등 교류사업 추진' 피력(11.11, 중앙통신)
- 北 역기선수들, 11월 11일 '2014년 세계역기선수권대회'에서(카자흐스탄 알마티) 금메달 획득(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계급교양 주제의 글 및 그림 작품현상 모집' 총화모임, 11월 1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1.13, 중앙통신)
- 신양군·용원광산·평안남도 연유상사, 모자이크 벽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설치(11.13, 중앙통신)
- 연풍과학자휴양소, 11월 16일 '첫기 휴양' 시작 보도(11.16,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오바마 "억류자 석방은 작은 제스처...북,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11/10, 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석방협상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도 개방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북한이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간에 여전히 중심적 이슈로 남아있다"며 "억류자 석방은 기쁜 일이지만 북한은 작은 제스처 이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클래퍼 국장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음.
 - 또한 방북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서 '고위급 정책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협상과정에서) 더 폭넓은 관심사, 특히 북한 핵개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오바마-시진핑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11/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중국의 3대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관련국들이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조속한 6자회담 재개 쪽에 방점을 찍었음.

- 기존 자세를 새삼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한미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은 북한이 최근 억류했던 미국인 2명을 석방하는 등 유화 손짓을 보냈으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관계 개선이나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됨.

■ 北, 南 패트리엇 도입에 "핵억제력 강화로 대응할 것" (11/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PAC)-3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비난하며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논평은 이날 미국이 남측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합의한 것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남측에 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며 "미국 '죽음의 상인'들이 고안한 무기 판매놀음은 동족 상쟁을 몰아오는 범죄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강토를 외세의 핵전쟁 마당으로 내맡기면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것은 쓸개 빠진 매국 역적들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남측 정부를 비난했다.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김정은에 친서 전달...김-클래퍼 회동은 불발 (11/10, 연합뉴스)

-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짧고 명료한' 내용의 서한을 가져갔으며 편지에 클래퍼 국장이 억류 미국인들의 귀환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personal envoy)라는 점이 명시됐으며 클래퍼 국장은 거의 하루를 북한에 머물렀으나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다.
- 그는 아울러 "클래퍼 국장이 북한 당국에 추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다른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인 석방 이외의 다른 현안을 꺼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부연했음.

- 미국인 2명 석방과 관련하여 CNN 방송은 북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으며 성명에서 김 제1위원장이 석방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두 사람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복역 기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 미 국무부 "클래퍼, 북한에 사과 안해...사과보도는 오보" (11/11, 연합뉴스)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CNN 방송 '뉴 데이'(New Day)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데려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사과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음.
- 사키 대변인은 "클래퍼 국장은 자신이 억류 미국인 2명을 데리고 나오는 임무를 맡은 베타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라는 내용이 담긴 짧은 서한만 북측에 전달하고 미국인들을 데리고 나왔다"면서 "클래퍼 국장이 한 임무는 바로 그것뿐"이라고 설명했다.
- 사키 대변인은 이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대가는 없다"면서 "이번 일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외교적 돌파구'(diplomatic opening)를 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美 재무부, 北 관련 금융거래주의보 또 발령" (11/14,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했다.
-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금융거래 주의보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 상업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에 담긴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4일 북한을 자금세탁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른 것임.

다. 중·북 관계

- 중국에 북한 근로자 유입 확대…작년 9만3천명 (11/11,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입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에 입국한 북한 근로자가 2010년 5만4천명에서 2013년 9만3천명으로 연평균 19.9%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 9.1%를 2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 올해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북한 사람은 9만2천명으로 이중 근로자는 47.8%(4만4천명)을 차지했으며 이는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 가운데 근로자 비율이 12.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인력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 입장에서 인력 수출이 상품 수출보다 부가가치가 높으며 중국으로서는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인의 일자리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기술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의 비자 발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옌벤, 북한 연결 국경통상구 인프라 보강 (11/13, 연합뉴스)
 - 13일 연변인터넷방송 등 현지 매체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린성 옌벤 조선족자치주는 국가 자금을 유치해 허룽시 난핑 통상구, 투먼시 국경 다리 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두만강 유역 대북 교역 중심인 옌벤주와 북한과 연결되는 국경통상구 기반시설 보수·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육로국경세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난핑 통상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무산 시와 마주해 있는 도시로, 추정 매장량이 45억t에 달하는 무산철광의 철광석이 중국으로 반입되는 주요 통로이며 중국의 국가 1급 통상구가 있는 투먼은 도로와 철도 교량을 통해 두만강 너머 온성군 남양구와 연결됨.
 - 또한 북한 함경북도·양강도와 9개, 러시아 연해주와 1개 국경통상구를 운영 중인 옌벤은 장기적으로 두만강 하구에 '북·중·러 3국 국제자유관광구'를 건설한다는 구상임.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北인민무력부장, 러 방문…양국 군사협력 확대 주목 (11/10, 연합뉴스)
 - 북한이 국방장관 격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8일 열린 드미트리 야조프 전 소련 국방장관의 90세 생일 축하행사에 참석하고자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의 '성의'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 8일 현영철 부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음.
 - 현 부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돈독해진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며 북한군에서 현 부장이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가능성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나토의 군사적 압박,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강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압박에 맞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합동훈련을 벌인 데 주목하며 러시아를 반(反)서방 군사협력의 핵심국가로 부각했음.
- “北-러시아,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 체결” <美매체> (11/12,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는 지난 7일 보도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9월 양국 영토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중인 상대방 국가 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양국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면 구금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입국자 혹은 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송환 대상자가 본국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대방 국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음.
 - 위성락 주러 대사는 지난달 20일 주러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인도 및 수용에 관한 협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이 협정에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기존 국제협약(제네바 난민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北 최룡해, 김정은 특사로 곧 러시아 방문 (11/14,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눈에 띄게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8일 열린 드미트리 야조프 전 소련 국방장관의 90세 생일행사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으며 최룡해는 김 제1위원장의 특사인 만큼 푸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최룡해 파견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바. 기타

■ 킹 美특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내용 훌륭" (11/12,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2일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그 결의안을 지지해왔으며 계속 지지할 것이며, 다음 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음.
- 킹 특사는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북미간 다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클래퍼 국장은 (북한과) 핵문제나 인권 이슈 등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음.
- 킹 특사는 또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한 강한 지지와 북한주민 인권 기록으로 받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것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들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인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쿠바,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ICC회부' 뺀 수정안 마련 (11/13,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약 50개국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결의안 내용 중에서 핵심을 뺀 것임.
 -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 등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쿠바는 과거에도 유엔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뿐 아니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차대통령-오바마 회담, "北비핵화 노력 더욱 강화" (11/11, 연합뉴스)
 -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과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포함해 취임 이후 4번째 회담임.
 -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20여분간 회담해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단합된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이 북한 정세 및 관련대책에 대한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래 정부의 통일 구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 오바마, 녹색기후기금에 30억달러 지원키로 (11/15, 연합뉴스)

-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돕고자 창설된 국제기구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4년간 최대 30억 달러(3조3천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취약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돕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어 "극한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회복·재건하려면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 GCF 사무국 유치국인 우리나라는 개도국 역량 배양을 위해 4천만 달러의 신탁기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사무국 운영 경비 등으로 9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는 등 4천9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거나 출연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FTA 30개월만에 타결...세계3대 경제권과 체결 (11/10, 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이 막을 내리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음.

-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고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으며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음.
 -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 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정상 "북핵포기 전략적 선택하도록 노력 강화" (11/10, 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취임 후 5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 또한 최근 남북관계 동향 및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며 이에 시 주석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남북대화과 협상, 관계개선을 지지하며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역내 주요 정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상세한 분석과 평가를 청취했으며, 양 정상은 상호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고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고위급 회의에서 그간 정체됐던 3국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을 평가했으며 두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연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음.

- **차대통령 "중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 적극지지" (11/11, 연합뉴스)**
 -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음.
 -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목표임.
 -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AP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해 박 대통령의 이번 지지 의사 표명이 새판짜기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외교정세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한중 정상회담 이어 연내 고위급 안보대화 전략대화 (11/1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와 전략대화 개최를 추진하는 등 연말까지 고위급 교류를 계속함.
 - 한중 양국은 연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정부 대표로 참가하는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중 양국은 또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인 차관급 전략대화도 연내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며 장 부부장이 방한해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회의에는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외에 지역, 국제 현안도 의제가 될 것임.

다. 한·일 관계

- 한일정상 8개월만에 대화…靑 "다양한 현안논의" (11/1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격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양국 국장급 협회가 잘 진전이 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음.
 - 청와대 측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과 아베 총리 밖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경색국면이 장기화하는 한일 관계의 개선방안의 모색뿐 아니라 북한 핵무기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북한 관련 문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문제 등 공통의 관심 사안을 두루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양국 정상의 구두합의에 따라 앞으로 열릴 5차 협회에서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이뤄진다면 극도로 냉각된 한일관계가 해빙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옴.

- 아베 "국장급 협의 진전에 박대통령과 의견일치" (11/11,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11일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전날 만찬 때 박 대통령 옆에 앉은 것에 관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대화가 시작됐다. 여러 사항에 관해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장급 협의 진전 방침을 언급하고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 정부, '日 이승철 입국 거부'에 유감 표명 (11/11,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이 가수 이승철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씨측이 독도 공연을 그 이유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 "보도된 것처럼 석연치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이 거절됐다 하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일본 당국에 (이씨) 입국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고 일본 측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승철씨에 대한 입국거부 사유는 밝힐 수 없다는 답을 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으며 이씨의 소속사는 10일 "이승철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 노래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따른 데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 '日 열도방어' 미일 연합훈련 한국군 옵서버참가 논란 (11/12,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공동야외기동훈련 (Keen Sword)'에 한국군이 호주군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올해 훈련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중령급 2~3명이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옵서버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 미일 공동야외기동훈련은 일본 열도 방어를 위해 격년제로 실시되는 훈련이며 자위대는 이번 훈련 때 일본 도서지역에 대규모 무력 공격이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미군 항공모함과 연계해 적국 항공기와 함정의 침입을 저지하고 자위대의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미군기로 수송하는 등의 훈련을 한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 한국군이 미일 공동야외기동훈련에 옵서버로 참가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에 관한 논란도 예상되며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닌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 도서지역 방어 등이 목적인 훈련에 한국군이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오바마, 시진핑에 "대중 억제·봉쇄 의도 없다" (11/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회동을 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 밝혔으며 "중국을 억제하거나 봉쇄할 의도가 없다"며 중국 관영 신화망이 12일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대중 억제 및 봉쇄)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솔직한 대화와 소통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경험을 거울삼아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함으로써 오해와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일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때에야 비로소 상호 이해와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국가상황과 역사, 문화, 발전의 길,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취동화이(聚同化異, 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화해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무턱대고 좇지는 아니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양국 정부가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과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진핑, 오바마에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 압박 (11/12,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우리는 (중미) '신형대국관계'를 (더는) 개념 위에만 머무르게 할 수 없다"며 신형대국관계 구체화를 강하게 요구했음.
 -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만찬을 겸한 비공식 회동을 하고 신형대국관계는 양측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조기에 거둔 성과에만 만족할 수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 건설 추진에 중요한 계기"라면서 "일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고 의견을 교환할 때에야 비로소 상호 이해와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신형대국관계 건설에 합의한 바 있지만, 양국이 받아들이는 신형대국관계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이런 발언 속에는 앞으로 양국이 신형대국관계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외교·안보 현안 등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한층 심화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됨.

■ 중국-미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전격 합의 (11/12,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앞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10~15년 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고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원의 비중을 2030년께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약속하였고 미국도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했음.
-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번 합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앞장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도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세계 기후변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됨.

■ 미국 전략수송기 중국 에어쇼참가, 미국서도 논란 (11/13, 연합뉴스)

- 지난 11일부터 중국 주하이에서 열리는 '제10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 미국이 전략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3'를 참가시킨 데 대해 미국 국방·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번 에어쇼에 군용기를 보낸 나라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3개국뿐인데다가, 미국이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군사교류를 중단한 상태이며 미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의 주하이 에어쇼 참가에 제동을 건 이유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였음이 거론되면서 미국의 C-17 수송기 파견을 '위선적'이라고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음.
- 한 안보 소식통은 "미국의 기술을 유출할 위험을 감수한 것은 물론,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우려까지 떠안은 처사"라고 지적했지만 미국의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이번 C-17 수송기의 주하이 에어쇼 참가

결정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춘 일종의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풀이했음.

바.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사. 미·러 관계

- "푸틴-오바마 APEC서 3회 짧게 만나...면담 20분" (11/12,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 이상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도의 양자회담이 아니라 APEC 회의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스탠딩 면담'에 그쳤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11일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이 APEC 회의 막간을 이용해 두 차례 이상 만나 짧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양자 관계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했으나 오바마 대통령과는 회담하지 않았으며 로이터 통신은 푸틴과 오바마의 이런 짧은 접촉이 러-미 양국 관계의 긴장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음.

아. 중·일 관계

- 중국-일본, 2년반 만에 정상회담...아베 "관계개선 첫 발" (11/10,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약 30분간 대화했으며 회담에서 현안인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중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 반 만에 성사된 것임.
-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일중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에 다시 선, 관계 개선의 제 1보(步)가 됐다"고 말했으며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연락 매커니즘을 가동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사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 '동상이몽' 시진핑-아베, 정상회담서 뭘 주고 받았나 (11/10,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주석은 회담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2012년 9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 등을 염두에 둔 듯 "최근 2년간 중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비곡직'(是非曲直.누구의 잘못인지)은 명확하다"고 역설했으며 그러면서 시 주석은 역사인식의 중요성 인식, 신중한 군사안보 정책 등 '일본이 해야 할 바'를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시 주석의 예봉을 흘려보낸 뒤 자국 취재진 앞에서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자평을 내 놓았으며 또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온 센카쿠 열도 주변 위기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한 성과를 강조했다.
- 시 주석으로서는 회담에 응함으로써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한 자국 쪽에서 굳게 닫아두었던 중일 고위급 대화의 문을 열었고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이며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 그 자체로 '도넛 외교(전세계에서 정상외교를 피하면서도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못하는 상황을 풍자한 말)'라는 비판을 일부 불식하며 '대 주변국 외교 실패'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 중일, 정상회담 이틀만에 '센카쿠 합의 해석' 갈등 (11/12,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2년반만의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이틀만에 양국이 7일 합의해 발표한 '관계개선 4대 원칙'에 포함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관련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 '서로 다른 견해(중국 측 발표는 서로 다른 주장)'가 존재한다는 문구가 4대 원칙에 포함된 데 대해 11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자 '센카쿠에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로 다른 견해'는 중국이 작년 11월 센카쿠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중국은 12일 발표한 주일 대사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기시다 외무상 발언에 "중대한 관심과 불만을 표명한다"며 응수했으며 외교가에서는 양측이 극도로 민감한 영토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외교적 봉합'을 한 만큼 해석을 둘러싼 일정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자. 중·러 관계

- 푸틴-시진핑, 양자회담서 17건 협력문서 서명 (11/10, 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저녁 베이징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한 뒤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한 17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하며 밀월관계를 거듭 확인했음.
 -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영가스업체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한 포괄적 협정이 체결됐고 '서부 노선'을 이용한 가스공급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도 서명됐다고 전했으며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 서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서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해 연 300억m³의 가스를 30년 동안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초석을 놓았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과의 갈등으로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아시아 지역으로의 가스 수출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처 확보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이날 서명식 뒤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유럽 수출량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차. 일·러 관계

- 푸틴-아베 2년새 7번째 회담...“평화조약 등 논의” (11/10, 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현지에서 약 90분간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두 정상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와 연결된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관련, 지난해 4월의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이와 함께 양측은 당초 올가을로 합의했던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하는 한편 푸틴의 방일 준비를 위한 외무차관급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 “일본, 러시아 극동~도쿄 연결 가스관 건설 제안” (11/10, 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가스업체 '가스프롬' 사장 알렉세이 밀레르는 1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이 자국 내 가스공급망 사업과 전력 사업 등에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해와 이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 측의 제안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도쿄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이 같은 제안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제안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완전히 밀리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11/10,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자 보도에서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매춘·색정문화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고 전했다.
 - 중앙통신은 "조선이 이번에 상기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정부의 아동중시정책과 인권 분야에서 자기 할 바를 다해나가며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과시"라고 강조했다.
 - 이 의정서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음란물 등의 범죄 규제와 처벌, 국제적 공조, 피해아동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북한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음.
 - 북한이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년 안에 의정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 보고서를 유엔 산하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영국 의회, 북한 종교자유 실태 조사...이달 말 청문회(11/11, 미국의 소리)
 -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제종교자유그룹(APPG)은 9일 공개한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힘.
 - 국제 범죄가 만연한 북한의 암담한 인권 상황과 심각한 종교자유 박해 현실,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COI 보고서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국제종교자유그룹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 영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독특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 그룹은 조사와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종교인, 탈북민들에게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과 대응, 종교 박해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안, 종교자유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음.

-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을 환영하며, 요청할 경우 신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성명에 따르면 오는 26일에는 일부 단체와 탈북민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 공식 청문회가 열릴 예정임.

■ 북한, 작년 中에 근로자 9만 3000명 파견...역대 최대(11/11, 데일리NK)

- 한국무역협회 중국 베이징(北京) 지부가 11일 발표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입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입국한 북한 근로자는 9만 3000명으로 2010년 5만 4000명에 비해 73% 정도 증가했음.
- 이는 연평균 약 2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 9.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 중국에 나온 북한 근로자들이 증가한 것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인력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보고서는 북한 입장에서 인력 수출이 상품 무역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아 외화벌이에 유리하며, 중국 제조업체는 자국 근로자의 인건비에 비해 절반 수준인 월 1500~1600위안(26만~28만 원)에 북측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북한 노동자의 대다수가 20, 30대여서 업무 집중도 및 생산력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2012년 북한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린(吉林)성 투먼(圖門)·훈춘(琿春) 등 북중 접경 도시와 인력과건 협의서를 맺은 것이 인력 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음.

■ 北 신문 "美, 인권소동 당장 중지해야"(11/15,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핵 문제 해결에서의 진정성을 논함'이라는 '논평원'의 글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거론하며 중단을 요구했음.
- 신문은 "전례없는 미국의 인권 소동은 우리의 핵 포기 실현 망상이 깨여 저나간 데로부터 강행하는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우리와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강경대처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음.

- 노동신문이 거의 매일 기자 개인의 실명으로 일반적인 대남·대외정책에 관한 '논평'을 실지만 '논평원의 글'은 이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고 노동당의 정리된 입장으로 간주됨.

2. 북한 인권

- 킹 특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내용 훌륭"(11/12, 연합뉴스)
 -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2일 외교부에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EU가 제출한 내용(text)은 매우 훌륭한 내용"이라면서 미국의 지속적 지지 및 다음 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서의 찬성을 예고했음.
 - 킹 특사는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북·미 간 다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클래퍼 국장은 (북한과) 핵문제나 인권 이슈 등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음.
-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COI 보고서 논의 원해"(11/12, 미국의 소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례보고를 받았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절반 가량의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올해 안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내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음.
 - 11월 안보리 의장국인 호주의 개리 킨란 대사는 10일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호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이사회에서 올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내용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말했음.
 - 킨란 대사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북한 당국이 비핵화 규범과 안보리 결의안은 물론 인권과 관련한 모든 국제 규범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캐나다 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11/12, 미국의 소리)
 -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자유당 소속 어윈 커틀러 의원이 지난 7일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인들의 청원서를 제출했음.
 - 커틀러 의원은 이번 청원운동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비슷한 법안이 미국과 일본에서 제정됐고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음.

-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막(11/13, 연합뉴스)
 -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과 행복한 통일'을 주제로 '샤이오 인권포럼'을 개최함.
 - 포럼에서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마르주키 다투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함.
 -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 교화소의 인권 실태와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함.
 -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강제북송 탈북자들이 수감된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의 식량과 위생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화소 운영 수칙을 북한에 권고할 필요를 제기했음.

- "교류협력 바탕 위에 北인권문제 제기해야"(11/13, 연합뉴스)
 -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은 13일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한 '인도적 대북지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발제문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바탕 위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음.
 - 김 원장은 "우리가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적 공세보다 과거 독일처럼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현실적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음.

- 국제 인권단체들,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촉구(11/13, 미국의 소리)
 -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앰네스티, 세계기독교연대, 북한인권시민연맹 등 8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함.

- 단체들은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음.
 - 국제사회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임.
 -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전 세계가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음.
- 쿠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ICC회부' 뺀 수정안 마련(11/13,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약 50개국이 마련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함.
 -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 등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사실상 확정(11/13, KBS)
 -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방한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2일 박원순 시장과 만나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전했다.
 - 두 사람은 사무소의 보안 문제와 임대비용 등에 대한 행정적인 협의를 나눴고, 조만간 계약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계자는 지난 9월 박 시장이 뉴욕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국회 비준 사항이어서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초쯤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루스만 "北 인권문제, 책임문제는 무엇보다 중요"(11/14,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일부 조항의 수정을 전제로 자신에 대해 방북을 초청한 것과 관련,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밝혔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가 ICC 표현 등을 삭제한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쿠바 수정안을 보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돼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묻는다는 COI 주 임무와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공동의 대응을 촉구함.
 - 그는 쿠바가 수정안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적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쿠바를 결의안 등과 관련한 교섭 담당자(interlocutor)로 선정했다고 들었고 쿠바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제가 북한 대표단과 나눈 이야기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두 곳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 또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공동의 압박과 철저한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트랙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러, 북중 국경에서 노역하는 북한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거절됐으며 사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밖에 서울에 위치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부처와 협력해 순조롭게 진행돼 왔고 곧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COI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납북문제 및 강제실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남북 간 대화가 다소 불안정해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EU, '쿠바 수정안' 대응 새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11/15,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삭제한 쿠바의 북한인권 결의안 수정안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음.
 - 14일(현지시간) AFP가 입수한 EU의 수정안에는 유엔에 협조하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북한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음.
 - 외교관들은 이 조항이 북한인권 개선에 국제사회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그러나 AFP는 EU의 수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ICC에 회부해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3. 탈북자

- 남북하나재단, 탈북자 전문상담사 사례발표(11/11, 뉴스1)
 - 남북하나재단은 11일 "오는 12일 '着韓(착한)동행,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 시민단체 "탈북자 단체 이중지원·부실평가"(11/11, 뉴스1)
 - 탈북자 단체가 정부로부터 민간단체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등 부실한 평가·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1~2014년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012, 2013년 2년간 총 3500만원을 통일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해당 센터는 NK지식인연대의 SNS 계정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또 NK지식인연대의 사업 중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미디어 제작'과 관련해 2012년 11월에 제작된 각각 15여분 분량의 UCC동영상 4편은 통일부 지원금이 아닌 안전행정부 지원금 5000만원(2012)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센터는 주장했다.
 - 센터 관계자는 "NK지식인연대는 통일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민간단체 이중지원, 부실평가감독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통일부와 안행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제작된 동영상도 4편이 아닌 20여 편에 달한다"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동영상의 특성상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보다는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게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 "북한-러시아, 탈북자 강제송환 협정"(11/12, 미국의 소리)
 -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 키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했음.
 -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으로, 13장으로 이뤄진 협정문은 또 적법한 입국 요건, 조사 절차, 개별 사안 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음.
 - 다만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음.
 - `NK뉴스'는 강제송환 금지를 명시한 이 같은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북한 땅을 떠난 이들이 새 협정에 따라 송환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의미로 풀이했음.
 - 반면 레오니드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NK뉴스'에 이번 협정이 두 나라 간 불법 체류자 본국 송환 절차를 담은 순전히 기술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 미 국무부 "러시아 등, 자국 내 탈북자 보호해야"(11/15,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4일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러시아 등 역내 국가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음.
 - 이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日측, 납치담당상에 메구미 사망 조사내용 보고"(11/11, 동아일보)
 -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측이 요코타 메구미(横田惠)의 사망 배경 조사 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게 "조사 결과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는 메구미의 사망과 시신 유기에 대한 증언이 담긴 보고서에 대해 7일 한 일본 방송에 출연해 "신빙성이 없다"고 부정한 바있음.
 - 한편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이 메구미 사망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망 및 시신 유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만큼 이를 활용해 북한에 메구미 사망 진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요구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 중의원, 납치피해자지원법 통과...북-일 협상 진전 대비(11/15, 미국의 소리)
 - 일본 중의원이 일본인 납북자들의 귀국 후 생활지원책을 확장한 '납치피해자지원법개정안'을 14일 일본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개정안은 곧 참의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음.
 - 개정안은 납북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이들이 귀국할 경우 노후 소득을 보전하는 '노령 급부금'을 설치했으며, 소득이 낮은 60세 이상의 납북자와 그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납북자들의 경우 납북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국민연금을 일괄 지급받게 됨.
 - 또한 북한에 납치됐다 귀국한 일본인들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정부 지원금 지급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어 내년 3월에 끝날 예정이지만, 개정안은 귀국 후 생활형편에 따라 최장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WFP "내년 3월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중단될 수도"(11/10, 뉴시스)
 - 실케 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대북 식량 지원 자금을 목표액의 4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년 3월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진벨재단, 북한에 결핵치료 병동 3동 더 짓기로(11/11, 미국의 소리)
 -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3주 간 북한 내 다제내성 결핵치료센터 12 곳을 방문했으며, 내년 봄 북한에 결핵치료 병동 3동을 더 짓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지원 활동이 알려지면서 결핵치료센터에 등록하는 북한 환자들이 많아졌다면서 치료센터마다 병실이 크게 부족해 병동을 추가로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며, 건축자재는 재단이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방북기간 동안 결핵치료센터의 환자들을 진찰하고 천 백여 명의 환자들에게 미화 약 70만 달러 상당의 결핵 치료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북한, 개성공단 에볼라 검역장비 지원 요청(11/11, 미국의 소리)
 -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을 대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역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 인원들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고막 채운계를 이용해 에볼라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남측 인원들의 출입경 불편 해소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41만 달러에 달하는 열 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 통행검사소에 무상으로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열 감지기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만큼 북측과 임대 합의를 체결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가져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산림복구 운동 강조..한국 "지원 가능"(11/12, 미국의 소리)
 -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나무심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북측 산림 조성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북측이 협력해 오길 바란다고 언급함.
 -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 산림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힘.
- 정부 이달 내로 대북 사업 민간단체 첫 지원(11/14, 아시아경제)
 -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공모한 단체에 조만간 자금 지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30억 원으로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분야에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기로 하고 8월 말까지 농업은 온실 사업, 보건의료 부문은 아동질병 치료·예방 등 진료소 건립, 축산은 낙농 사업 등에서 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13개 단체 1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사업 단체가 북측과 협의를 마치고 물자를 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물자 반출에 맞춰 이달 안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2억~3억 원으로 전망됨.
- 북한서 187만 달러 규모 새 종자 생산사업(11/14, 미국의 소리)
 -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벨트훈게르hilfe(Welthungerhilfe)의 게르하르트 우마허 북한 담당 국장은 13일, 내년부터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 종자 생산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 우마허 국장은 새 사업이 북한 내 5개 도 3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생산된 종자는 북한 전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음.
 - 주로 중국 배추와 토마토, 고추 등 8 가지에서 10 가지 종류의 채소 종자를 생산할 것이며, 품질 좋은 종자를 북한 농민들에게 지원해 식량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

-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되며, 사업예산 150만 유로, 미화 187만 달러에 대해 최근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음.

8. 북한동향

- 北 최고인민회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매매, 매춘, 색정문학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11.10, 중앙통신)
-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이 5일 발표되었으며, 지난 9월 9일 유엔 주재 北 상임대표는 유엔본부에서 상기의정서에 서명하였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